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448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345kV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의 적기 확충을 위하여 국가 주도의 새로운 거버넌스 신설, 초장기 전력망 기본계획 수립, 인허가 의제 확대 등 인허가 신속처리, 주민 및 지자체에 대한 보상·지원 강화 등을 내용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844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전력망 위원회의 구성, 실무위원회에 위임사항, 입지선정의 기간, 부대공사 인허가 특례의 적용 범위, 선하지 매수 청구 기한, 주민지원 특례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전력망위원회 등 절차 등의 사항(안 제3조~제14조)

- 1)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공청회가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한 경우 등은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청회의 미개최 사유 등을 일간신문 및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견을 들어야 함.
- 2) 전력망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갈등중재, 사회기반시설 공동개발, 부대공사 인허가 등의 심의·의결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조치계획 제출, 이행사항의 전력망위원회 보고 등을 규정.
- 3) 전력망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위원장이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지명하는 자로 함.
- 4) 실시계획의 승인, 사회기반시설 공동개발, 규제개선 신청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력망위원회가 미리 심의·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처리를 위임할 수 있음.

나.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한 사항(안 제15조~제24조)

- 1)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기초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을 출입시에는 제39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그 일시·장소를 알려야하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 관리자 등의 사전 동의를 득해야 함.
- 2) 개발사업 시행기간의 변경, 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잔여지 매수 등을 통한 구역 변경 등은 신고 및 수리 대상이며, 사업면적 또는 선

로의 길이가 100분의 30 이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등(안 제25조~제31조)

- 1)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 기간은 첫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며, 주민 등은 이에 대한 의견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 3) 일시 사용 진입도로 등의 설치 공사, 헬기장 등 자재 운반을 위한 필요공사 등을 부대공사인허가 신속처리 대상으로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쟁 또는 사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대공사 인허가를 신속처리.

라. 주민 및 지자체 등에 대한 지원·보상 특례(안 제32조~제37조)

- 1) 선하지 매수 청구는 최초 보상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토지 분할이 불가한 경우, 토지의 거래가 제한 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매수할 수 있음.
- 2) 345kV 이상 옥외변전소 주변지역 주민은 주택매수 청구 가능.
- 3) 「송전설비주변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해당금액을 관할 시·군·구에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송변전 설비 근접지역(설비 주변 300미터 이내) 및 밀집지역(345kV 이상 설비가 2개 이상인 지역)에 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4)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주변지역 거주 주민 및 수용 대상 토지

등 소유자가 50% 이상 참여하는 읍·면·동별 1개의 협동 조합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계통접속비용 등의 자금, 행정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5)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시·군·구에 실시계획의 승인일로부터 공사완료일 이후 2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마. 보칙 등(안 제38조~제40조)

- 1) 사업시행자는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밀집지역이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산업입지법」 제2호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필요한 전기공급시설이 우선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2)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유용상 사무관 앞
- 전화 : 044-203-3931
- 팩스 : 044-203-4756
- 이메일 : yys7856@korea.kr

대통령령 제 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기존 송전·변전설비의 개량, 증·개축 및 이와 관련된 사업
2. 제26조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사업과 공동개발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제2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등

제3조(공청회 개최의 생략 등)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2.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및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공청회의 미개최 사유
2. 기본계획안의 열람방법
3.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정부의 에너지 기본계획 변경 등 근거가 분명한 사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2. 전력수요 전망 및 전력망 확충 관련 제도 변경 등 변화된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력망 확충 전망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3.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단계별 추진전략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4. 계산착오, 오타,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

항을 수정하는 경우

제5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의 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이하 “전력망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신규 지정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종류, 명칭, 사업목적, 대상지역 및 설치 완료의 시기
2.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3. 법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의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제6조(전력망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의 이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망위원회가 법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시행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력망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법 제8조제2항제5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시행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통보받은 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치계획을 검토하여 조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계획의 조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시 심의·의결 사항의 이행사항을 전력망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7조(전력망위원회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심의 사항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전력망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지명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전력망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지명하는 특별시장등을 말한다.

제8조(전력망위원회 운영) ① 전력망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전력망위원회를 대표하고, 전력망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전력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전력망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지정된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④ 전력망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력망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망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전력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전력망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망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임

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력망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전력망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0조(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전력망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력망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전력망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2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전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전과 관계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지명하는 해당기관 소속 공무원
3.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해서는 제9조,

제10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⑦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실무위원회에의 위임)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실무위원회에의 위임에 관하여 미리 전력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법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공동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에 관한 사항
4. 법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규제개선 신청 등에 관한 사항(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5. 법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배전 및 송전용 전력망과의 연계 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력망위원회가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실무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우는 전력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4조(수당 등) 전력망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

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전력망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과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3장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15조(기초조사)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제39조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2. 나무·흙·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타인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제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④ 토지의 소유자·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측량 결과가 포함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발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지번·지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
4.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 시설물의 설치계획
5. 개발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사용 진입로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제출서류) ①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수용하거나 사용할 대상을 기재한 물건이나 권리 목록
 2. 수용하거나 사용할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3. 수용하거나 사용할 대상이 어업권인 경우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
 4. 수용하거나 사용할 대상이 양식업권인 경우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원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대상이 권리인 경우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② 법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설명서
 2. 개발사업구역 위치를 표시한 축적 5만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 위치지도
 3. 지적현황측량도
 4. 시설물 배치도
 5. 도시계획시설인 전기공급설비의 결정조서
 6.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서류(공동개발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영 제22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검토서
 8. 실시계획의 변경 내용 및 변경이유서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18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신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기간의 변경

가. 개발사업이 「전기사업법」 제25조제6항제3호에 따라 준공예정일이 변경된 경우

나. 개발사업 구역의 조경 공사나 훼손된 지역의 복구공사 등을 위해 시행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같은 개발사업구역에서의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사양(仕様)의 변경

3. 지형 사정,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잔여지의 매수 등으로 인한 구역 변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 그 신고 내용이 법 제13조제1항제8호의 협의와 관련된 사항이면 국방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 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실시계획 변경승인의 전력망위원회 생략)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실시계획의 사업면적 또는 선로의 길이가 100분의 30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

를 말한다. 다만, 단위사업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초과인 변전소의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실시계획 승인 등의 고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명칭

2.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개발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5. 개발사업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7.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시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도지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시를 한 경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39조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공고·통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해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목적
2.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3.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개요
4. 개발사업구역의 위치(토지등의 명세를 포함한다) 및 면적
5.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39조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재하여 일반인과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개발사업의 개요
2. 열람기간
3. 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4.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5. 그 밖에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주민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조(제출된 의견의 처리등) ① 주민등은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에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

장은 제출받은 의견을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의견을 함께 알릴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설명회의 개최)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2항본문에 따라 주민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를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에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되,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가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주민등에게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주민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공고
2. 제39조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14일 이상 설명 자료를 게시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 개최 시 제출된 주민등의 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4조(공청회의 개최) ① 사업시행자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청회 개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제39조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3. 개발사업의 개요
4.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진술 방법
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공청회가 개최된 후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공청회가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공고

2. 제39조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14일 이상 설명 자료를 게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등

제25조(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등의 특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 개발사업에 관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 기간은 첫 회의 개최일부터 1년까지로 하며,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입지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 따라 후보입지가 정해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후보입지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회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6조(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27조(「환경영향평가법」의 주민의견수렴의 절차 등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고 및 공람을 시행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제3항은 제외한다)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로,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보통신망”은 제39조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으로 본다.

제28조(신속처리 특례 대상 부대공사)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진입도로, 작업장, 야적장, 주차장 등의 설치 공사

2.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헬기장, 삭도장 설치 등 자재 운반을 위해 필요한 공사.

3. 그 밖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사

제29조(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절차)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35호까지에 따른 승인·허가·인가·신고·지정 또는 결정·면허·협의를 동의·해제·심의·등록·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부대공사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신속처리를 신청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부대공사인허가등 신청 당시 해당 부대공사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자료

2. 부대공사인허가등 신청 이후 해당 부대공사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3.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가 필요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②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전쟁 또는 사변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회신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속
처리 결과통보서로 해야 한다.

제30조(규제개선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
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
청할 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를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력망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 따라 규제개선의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
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
다.

1.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 그 밖에 전력망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규제개선의 검토에 필요하
다 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

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사업시행자의 사업 이행 현황,
규제개선 심의·결정 사항의 준수 여부 및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감독하게 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규제개선 부
여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사업의 이행 현황

2. 규제개선 부여 시 붙인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만 제출
한다)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추가적인 법령정비 및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
관의 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추
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는 경
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장 지원·보상에 관한 특례

제32조(사업시행자의 토지매수) ① 토지소유자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최초 보상 안내문을 발송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해외체류 등으로 인해 보상 안내문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등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1.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토지 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

3. 「민사집행법」에 따라 토지의 매수가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사업시행자가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매수금액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를 따른다.

제33조(주택매수 등 청구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특별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과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포함한다.

1. 76만 5천 볼트 옥외변전소: 최외곽경계로부터 사방 180미터 이내의 지역
2. 50만 볼트 옥외변전소: 최외곽경계로부터 사방 100미터 이내의 지역
3. 34만 5천 볼트 옥외변전소: 최외곽경계로부터 사방 60미터 이내의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속한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을 청구하는 경우 최대 지원액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34조(지원사업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지원금 전액을 동법 제8조제1항제1호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시·군·구의 장은 지원받은 금액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5조(송전·변전설비 근접·밀집 지역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송전·변전설비 근접지역(이하 “근접지역”이라 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2. 송전·변전설비 밀집지역(이하 “밀집지역”이라 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포함해 34만5천볼트 이상의 송전·변전설비가 2개 이상인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가산액의 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① 법 제 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이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을 말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소유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 당시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를 말한다.)와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이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 이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하며, 읍·면·동별 1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이하 같다)을 설립하여 10메가와트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읍·면·동의 주민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이때 주민등 외의 자는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2. 그 밖에 산업안전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협동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행정 지원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소요되는 계통접속비용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지원
3.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등에 대한 기술

적·행정적 지원

4. 사업시행자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의 장기 임대
5.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7조(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가목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사업시행자가 소유·운영하는 설비를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의 대상지역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이 속하는 시·군·구를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2항의 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지원비용, 지원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24조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신청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적 지원 신청서를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일부터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이후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신청은 제3항에 따라 정해지는 시·군·

구별 지원 규모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⑥ 재정적 지원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액이 개발사업의 규모가 실시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져 실제 지급되어야 할 지원금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6장 보칙 등

제38조(송전·변전설비 밀집지역에 대한 전력의 우선공급) 사업시행자는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밀집지역에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기공급시설이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정보공개) ①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는 정보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0조(업무의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제20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한국전력공사법」 제2조의 한국전력공사에 위탁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